

[청구인] ○○○

[피청구인] ○구청장

[주문] 청구인의 청구를 「기각」 한다

[청구취지]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○구 ○○로○○번길 ○○(○○동)에서 ‘○○○○○○’ (이하 ‘이 사건 숙박업소’라 한다)라는 상호의 이 사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.

나. 청구인의 처(○○○)는 20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:○○경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사실이 인천○○경찰서에 적발되었고, 인천○○경찰서장은 20○○. ○○. ○○.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, 피청구인은 20○○. ○○. ○○. 청구인에게 위 위반사실이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○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(청문실시 통지)를 하였다.

다. 피청구인은 20○○. ○○. ○○. 청문을 실시하였고, 20○○. ○○. ○○.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○개월 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2. 청구인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① 사건 당일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의해 적발된 점, ②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, ③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

○개월 영업정지는 폐업이나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3. 피청구인 주장

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인천○○경찰서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위반업소 통보를 받고 청문절차를 통해 청구인에게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한 사항으로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고,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,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보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.

4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가. 관계법령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

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[별표 7]

나. 사실관계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)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○구 ○○로○○번길 ○○(○○동)에서 ‘○○○○○○’라는 상호의 이 사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.

2) 청구인의 처(○○○)는 20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:○○경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○만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종사자 여성에게는 ○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사실이 인천○○경찰서에 적발되었고, 인천○○경찰서장은 20○○. ○○. ○○.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

게 통보하였다.

3) 피청구인은 20〇〇. 〇〇. 〇〇. 청구인에게 위 2)의 위반사실이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〇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(청문실시 통지)를 하였고, 20〇〇. 〇〇. 〇〇. 〇〇:〇〇에 청문을 실시하였다.

4) 피청구인은 20〇〇. 〇〇. 〇〇.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〇개월(20〇〇. 〇〇. 〇〇. ~ 〇〇. 〇〇.)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5) 청구인의 처(〇〇〇〇)는 20〇〇. 〇〇. 〇〇. 위 2)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(벌금 〇〇〇만 원)을 받았다.

다. 판 단

1) 먼저, 관계법령을 살펴보면,

가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,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으며,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나)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 [별표 7]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II. 개별기준 1. 숙박업 아목 2)에서는 숙박업자가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‘영업정지 3월’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

으며, I. 일반기준, 제4호 가목에서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영업정지의 경우 그 처분 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2) 다음으로,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를 살펴보면,

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숙박업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엄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처(○○○)는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○만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종사자 여성에게는 ○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벌금 ○○○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.

그리고,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(대법원 2003. 9. 2.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), 사건 당일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의 성매매알선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.

아울러,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○○○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 [별표 7] I. 일반기준의 제4호가목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,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근절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,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성매매 알선행

위의 유사 사례 빈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.

5. 결 론

그렇다면,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